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적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아 · 태 경제협력회의)각료회담에서 21개국 불법 복제 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 피해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 보호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특허권 등을 침해받은 기업의 불만 처리를 맡을 지적재산권(IPR)서비스센터 설치, 영화 및 음악관련 상품의 해적판 박멸, 개발 도상국에 대한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재육성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는 APEC 회원국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특허를 침해받는 외국기업의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각료회담에서 IPR의 설치를 제안했지만 중국 등이 자금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측은 또 이번 회담을 앞두고 할리우드 영화 및 음악 산업 등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광디스크를 사용한 해적판 박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세계에서 적발된 해적판 CD의 98%가 아시아산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포괄보호 협정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단속강화가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발명특허 신청 급격히 증가

중국 특허 신청량이 급격히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특허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발명특허 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0% 증가한 3만8,56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실용신안 특허는 같은 기간 10% 늘어난 3만9,992건, 외형 디자인특허 신청은 14% 증가한 3만5,528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생명과학 특허신청 부문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특허신청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 임박

유럽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첫번째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이 임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재 소프트웨어 메이커들이 구체적인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소위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소프트웨어 특허법의 제정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법을 기안한 유럽의회의 알렌 맥커시 의원은 '현재 마련된 초안의 내용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이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법안이 현재 상태로 통과되면 아마존의 원클릭 쇼핑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유럽에서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광고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만화로 보는 발명 · 특허 이야기 발명의 10계명 ⑨

폐품을 이용해 보자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